

북·미 정상 실효적 비핵화 해법 마련하면 연내 종전선언

남은 과제와 전망

4·27 남북정상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전환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남북이 분단과 전쟁,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뒤로한 채 평화와 번영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민족적 과제를 최종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북 합의 이행 의지와 절차, 속도도 중요하다.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국민은 물론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정전(停戰)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안에 종전(終戰)선언을 하기로 하는 등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10·4선언의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합의 보다 이행·속도 중요

국제사회 지지·이해 구하고

국민 관심·정치권 협조 필수

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 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무엇보다 연내라는 시한은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에 상당한 동력(動力)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월말 또는 6월초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해법이 마련되면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체제보장 카드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반도 긴장 문제 해결에서 북핵 문제

가 문제 해결의 입구라면 평화체제 문제는 출구라는 성격이 있어 남북 정상이 올해 안에 정전상태를 종식하기로 한 것은 향후 북핵 문제 해결에서도 청신호가 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은 29일 “남북 정상이 올해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이 없었다면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한 뒤 남·북·미에 중국을 더해 종전선언을 완성하는 큰 그림이 그려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다. 한반도 비핵화의 해법이 이 회담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 전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 성공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단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축복과 기쁨의

메시지를 보내 향후 북미정상회담이 순항할 것을 예상이 일반적이다.

남북도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완성하는 날까지는 약속을 실천하고 난관을 극복하는데 민족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남북 합의 못지않게 이행 절차와 속도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대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남북 합의는 반드시 이행된다는 합의→이행→실행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후속 논의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토론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지지는 물론 정치권의 협조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보수야당의 정치공세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산책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가을 평양 방문하고 김정은 내년 서울 답방?

정상회담 정례화 기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행을 넘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행까지,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가 이뤄질 것인지 주목된다.

남북 정상회담의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판문점 선언에 문 대통령의 올 가을 평양 방문이 포함되면서 다음에는 답방 형태로 김 위원장이 서울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4·27 회담에서 북측 최고지도자가 처음 남쪽 땅을 밟은 데 이어 한국의 수도인 서울이나 혹은 청와대 방문이 성사된다면 이 역시 큰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내달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가 한층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상회담 역시 자연스럽게 정례화 되지 않느냐는 관측

을 내놓고 있다. 특히,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경우 워낙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인데다 장기기간에 걸쳐 수시로 소통을 이어갈 수 밖에 없어 것이 수 차례 정상회담을 더 개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남북은 그동안 전서 교환이나 특사 파견처럼 복잡하고 의례적인 형식을 통해 상호 의사를 주고받았으며, 이런 형식 탓에 신속한 의사소통이나 안정적 상황관리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한다면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의사결정도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정상회담준비위원장이었던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 당시 북측과의 실무 합의문과 관련해 “우리가 욕심을 냈던 것이 거의 들어가 있었는데 딱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정상회담 정례화였다”고 밝힌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5월 고위급·적십자 회담 줄줄이...정부 후속조치 분주

2018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남북회담들이 5월에 잇따라 열린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 이번 주 추진위 첫 회의를 열고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조병균 장관 주재로 29일 오후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회의의 모 두발언에서 “합의를 어떻게 잘 이행해 나가느냐, 그냥 이행하는 게 아니라 속도감 있게 압축적으로 잘 이행해 나가느냐. 이행 과정에서 난관이 있더라도 뒤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나아가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합의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조만간 장성급 군사회담, 적십자회담, 고위급회담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북한과 협의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5월 안에 장성급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고위급회담 등이 모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성급 군사회담은 ‘판문점 선언’에 ‘5월 개최’가 명시돼 있다.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리는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2월 이후 11년 만이다.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들이 협의될 예정이다.

8·15 광복절을 계기로 진행할 이산가족·친척 상봉행사를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회

담도 5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에 2~3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달에 남북 적십자 간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진행되는 것은 2015년 10월 이후 3년 만이다.

고위급회담도 5월 개최가 유력하다. 고위급회담이 열리면 앞으로 남북 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할 개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시기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6·15 남북 공동기념행사도 고위급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체육회담도 서두를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판문점 선언, 발효전 국회 비준 절차 밟을까

靑, 법제처 검토 거쳐 결정

한국당 반대 커...민주당 신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고스란히 담긴 ‘판문점 선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공포되는 과정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거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을 정권교체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해서 추진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나, 국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정쟁 대상으로 전락해 역사적 합의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판문점 선언을 ‘위장평화 쇼’로 규정한 상황이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밟을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국회 절차를 건너뛰고 판문점 선언을 발효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체결·비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공포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

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이라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판문점 선언이 법적 효력을 갖는 과정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가 경우에 따라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일단 법제처 등 관련 부처 간 검토를 거쳐 국회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내보였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조만간 당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하나로마트의 꿈과 약속 진심을 채웁니다 안심을 담습니다



보다 행복한 농촌, 보다 건강한 도시!
하나로마트의 소중한 꿈입니다.

정직한 가격, 믿을 수 있는 품질!
하나로마트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로마트는 그 꿈을 실현하고,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